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담당자 : 강종선 심의관

공보관실 : ☎ 3480-1324

2013. 2. 19.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하여 2012. 7. 구성된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8. 1. 18. 제7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안을 마련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위 최종형태안에 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3. 2. 18.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함
- 이날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희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종호 부장판사(국민사법참여위원회 선임전문위원)가 최종형태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김성희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 황정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이 지정토론을 하였음
- 공청회 결과 요약
 -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현행 권고적 효력보다 강한 효력을 부여하되 법적 기속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음.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 법적 기속력까지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일정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의 문제, 법원의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예기

치 못한 부작용, 배심원의 전문성 부족, 여론재판 등을 우려하여 대상범죄의 범위를 신중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양형심리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심원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기계적인 준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양형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여 배심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향후일정

- 2013. 3. 제8차 회의 ⇒ 공청회 결과 검토 후 최종형태 확정
- 2013. 3. 대법원장 보고
- 2013년 내 입법추진

①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3. 2. 18. (월) 14:00 ~ 17:3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 사회자 : 심희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 김성희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
 - ▶ 황정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② 최종형태안의 주요내용

(1) 기본 전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의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1단

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그 동안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함

-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들의 경우에는 최종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밖에 세부적인 재판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도설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최종형태안은 위와 같은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함.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미국식 배심재판에서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① 현행 헌법상의 적합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실증적인 분석 결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큰 무리 없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함

(3) 평결방식 - 가중다수결제 채택

- 현행 참여법률은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음
- 최종형태안은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하여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3/4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함. 다만,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hung jury)에는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하되 배심원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형태안에서도 평결의 원칙적인 모습은 만장일치이므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

(4) 실시요건 - 일부 강제주의 도입

- 현행 참여법률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신청주의)
- 그 동안 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들에 있어서는 정작 피고인의 불신청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최종형태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함

(5) 법정구조

- 현행 참여법률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서로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법정구조에 관하여는,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 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최종형태안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변경함

(6) 기타

-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민법상 성년자의 연령이 만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평의 전 재판장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시킴

- 그 밖에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및 공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항소사유 등은 지난 5년 동안의 시행 성과 분석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7) 최종형태안 요약

	쟁점	의결내용
1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사실상 기속력 부여 :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지만, 법원의 배심원 평결 존중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 다만, 배심원 평결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평결방식	○ 현행 단순다수결제를 폐지하고 가중다수결제(3/4 이상 찬성) 도입 ○ 평결불성립(3/4 이상 찬성 불성립) 시 배심원 평결 없이 판결 선고. 다만, 배심원 의견 참조 가능
3	실시요건	○ 피고인 신청주의는 그대로 유지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가능 - 강제주의적 요소 일부 도입
4	법정구조	○ 참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좌석 배치를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좌석 배치와 동일하게 함
5	기타	○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재판장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 포함 ○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제시,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관련 규정, 공판절차 관련 규정, 재판장 설명, 항소 부분은 현행 제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

③ 공청회 결과 요약

(1) 배심원 평결의 효력

-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또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 이해할 경우 법적 기속력 부여 가능하나, '신분이 보장된 직업법관'으로 이해할 경우 법적 기속력 부여는 곤란(이준일)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므로 법률로써 제한 가능. 다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등 비례의 원칙

을 따라야 함(이준일)

-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하여만 평결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아닌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이준일)
- 현실적으로 즉일재판이 많은 점,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이 반드시 올바른 결론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인식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약한 기속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법관이 판결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권고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의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방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김혜정)
-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심원들이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판사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심원 평결에 대한 기속력 부여도 중요하지만 배심원이 독립적으로 평결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 개선 및 제도적 정비 필요(김성희)
-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목표를 포기하여서는 안 됨(황정근)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규정방식의 제고를 요함.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문에서 선언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어색함. 예외사유는 판결서 기재사항에 관한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되, 논리법칙·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차피 채증법칙 위반으로서 위법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불필요하고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한 경우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수정(황정근)
- 배심재판의 취지가 직업법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재판, 이웃에 의한 재판, 시민의 양식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고 판단의 권리와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이므로 배심원 평결에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의 기속력 부여'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봄. '법적 기속력 부여'를 위해서는 헌법개정 문제와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함(신종원)

(2) 평결방식

-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을 넘어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 만장일치 또는 가중다수결로 하는 방안 적절(이준일, 김혜정, 황정근)

(3) 실시요건

-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또는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 이해할 경우 강제주의 도입 가능하나, ‘신분이 보장된 직업법관’으로 이해할 경우 강제주의 도입은 곤란(이준일)
-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참여재판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여야 함(이준일)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다만 ‘강제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법원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등 도입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초래하여 또 다른 문제 발생 우려 있음(김혜정)
- 일부 강제주의 도입으로 정치인·재벌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직업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횡령·배임의 문제와 사실관계가 복잡한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김성희)
- 여론의 흐름과 정치적 고려로 인한 배심원 평결은 국민참여재판이 지양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점(김성희)
- 피고인이 극력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함.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함. 저명인사에 대한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고인일수록 여론재판을 우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회부하는 것은 위헌문제 있음(황정근)
- 직권회부결정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황정근)

(4) 법정구조

- 참여법정의 좌석배치를 민사법정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더 나아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함(황정근)

(5) 기타

- 배심재판의 민주성과 법관재판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을 균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만 제한적으로 배심원 평의에 관여하도록 하여야 함(이준일)
- 죄수에 대한 판단, 법률적 가중·감경규정의 적용, 작량감경 등 양형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 많아 배심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죄 판단이 아닌 양형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 양형판단은 배심제의 특성이 아니고 그 전문성을 고려할 때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나아가 유무죄 심리절차와 양형 심리절차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김혜정)
- 일반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배심원들에 대하여 기계적인 양형기준 준수를 강제하여서는 안 됨(김성희)
- 배심원에 대하여도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 있음(황정근)
- 배심재판의 사회적 의의, 참여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신종원)

4 향후일정

(1) 최종형태안 확정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취합하여 2013. 3.경 제8차 회의에서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확정할 예정임

(2) 대법원장 보고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 3.경 대법원장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최종형태를 보고할 예정임

(3) 입법추진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됨
- 2013년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끝>